

# “美 관계 강화, 中 외면 아냐… 수출감소 원인, 경쟁력 약화”

추경호 부총리·이창용 한은총재  
“美中 양자택일 흑백논리 벗어나  
국익 기반 경제협력관계 확대”

“반도체·생산업 중심 수출이 문제  
중특수 사라져… 경쟁력 강화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탈(脫)중국 선언한 적도 없고, 할 의도도 전혀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 국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대(對)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앙 자택일해야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에 기반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었다. 중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심

리가 강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 중국대사를 만나 올해 예정된 한중 재무장관회의가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주기상(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때이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했다. 국

익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기업 중간재, 중국기업도 만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수출 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국의 경제회복 성장률에 따라 국내에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재고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얻은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 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해 50조원 세수부족 예상·추경없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 회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어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역외보조금법·핵심원자재법 등 협조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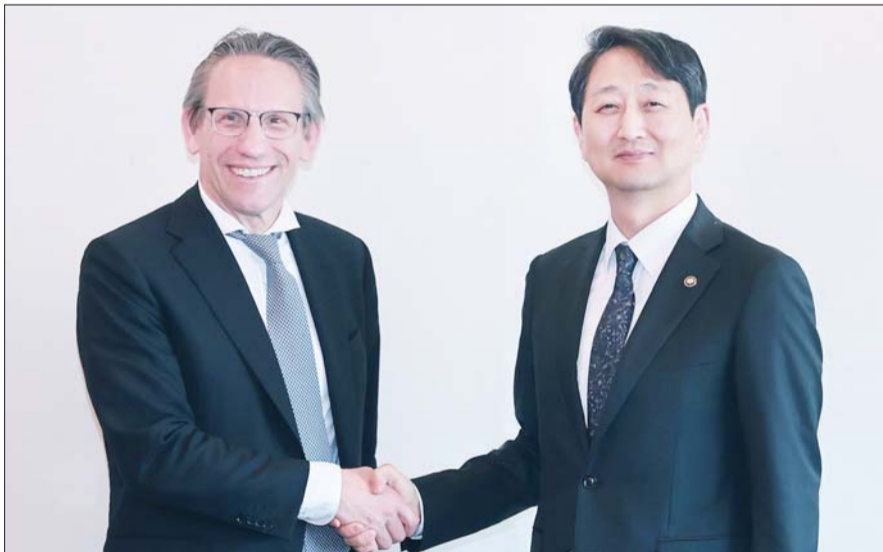
獨 수교 140주년… 공급망 강화 논의  
산업부,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

유럽(EU)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한 독일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의 교역액은 2019년 286억달러, 2020년 303억달러, 2021년 331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337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경제담당 사무차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특히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

분하게 고려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6일 발효돼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역외보조금은 올해 1월 12일 발효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나랏빛 안늘릴 것”… 추경 가능성 일축

추경호 “가계·기업·정부, 건전성 중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편성 여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나랏빛을 늘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가계, 기업 이든 정부든 각 부문의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 한도를 지난 수년 간에 비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다. 앞

로도 그런(건전 기조)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추경안 편성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 강제로 불용(不用)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질의에 답했다.

예산 ‘불용’이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편성된 국책사업 등이 취소·중단됐을 때 이런 조치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전경련, MSCI에 韓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

10년만에 선진시장 승격 도전

한국이 선진국에 도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에 ‘연례 시장 분류평가’를 앞두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등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김병준 회장직 무대행(사진) 명의 서한을 전달했다.

MSCI는 매년 6월 경제발전과 증권시장 및 유동성, 증권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독립시장

으로 구분한다.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면 1년간 검토를 통해 승격한다.

한국은 현재 신흥시장에 포함돼있다. 1992년 처음 신흥시장에 편입돼 2008년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기도 했지만 2014년에는 여기서도 제외됐다.

전경련은 ▲글로벌 경제대국 위상 ▲선진시장 수준의 증시 규모 ▲외국인 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 노력 ▲역외 NDF 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노력 등 5가지를 관

찰대상국에 올라야 할 근거로 들었다.

김 전경련 회장 직 무대행은 “한국 경제와 증권 시장이 이미 선진시장 수준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관찰대상국에 포함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고 향후 선진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가 큰 도움을 받고 글로벌 금융 확대로 MSCI에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우수 중소·중견기업 기술평가비 전액 지원

산업부 ‘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총 360건 대상… 최대 500만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에 200만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는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은 총 300건(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에는 총 60건(3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

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